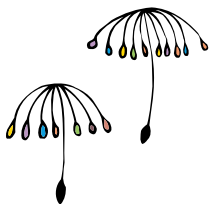


전쟁과 분단을 끝내는 한반도 평화협정

평화 홀씨



순서



- **전쟁을 끝내자!**
- 한반도 전쟁위기는 어디로부터?_3
- 미국이 씨 뿌리고 키워온 한반도 핵문제_4
- 북한의 핵 보유 동기와 개발 경과_6
- 대북 선제공격전략인 맞춤형 억제전략 _8
- 전면전을 부르는 국지도발 대비계획 _10
- 군사주권의 핵심 (전시)작전통제권_11
- 전쟁과 재침략의 길 가려는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_14
- 한미일 삼각 미사일방어(MD)_18
-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_20
- 동맹을 넘어 공동안보평화협력체로_21
- **평화에 살자!**
-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_24
- 핵 없는 세상을 위해_26
- 북한의 핵포기 입장과 조건_27
- 평화협정이란?_28
- 평화협정 체결의 역사_30
- 평화번영의 지름길을 개척하는 평화협정_32
-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드는 평화협정_33
- 통일의 대문을 여는 평화협정_34
- **통일로 가자!**
- 통일은 대박?_36
- 흡수통일은 재앙_38
- 독일식 흡수통일의 폐해_40
- 통일편의 추정하기_43
-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통일은?_45
- 통일방안과 통일국가 체제는?_46
- **따져보자 평화협정 Q&A**_48
- 평화통일을 위해, 평화홀씨가 되자~_64



전쟁을 끝내자!
평화에 살자!
통일로 가자!

60년 넘게 정전체제, 북미·남북 간 대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만성화되어 우리 민족은 단 한시도 제대로 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가까이, 평화는 먼 곳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동북아 질서 재편을 둘러싸고 미중간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형성하여 대중국 힘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이 기회를 틈타 재침략의 길로 나서며 동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일 동맹 강화에 반대하며 미국에 '신형대국관계'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용돌이치는 동북아 정세, 어떻게 해야 강대국간 패권 경쟁에 휘둘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만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실현하며 북미·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입니다. 이 길에 자주도, 평화도, 통일도 있습니다. 동북아 국가들이 공동안보평화협력체를 건설하여 공존, 공영해 나갈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전쟁을 끝내자!

한반도 전쟁위기는 어디로부터?

한국전쟁이 끝난 지 지금까지 60년 넘게 평화협정 체결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이 늦어지면서 한반도 정세는 짧은 대화와 긴 대결이 반복되고 전쟁위기는 일상화되었고 북미·남북 간 대결은 한층 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해 내고 점령통치를 꺾을 정도로 막강한 한미연합 전력을 키워 온 미국은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한미일 미사일방어 체계와 군사동맹 구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을 관철시키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도 끌어냈습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도 선제타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과 북한이 국지도발을 할 경우 도발 원점은 물론 지휘·지원부대도 타격하겠다는 '국지도발 대비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위기는 과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올까요? 아니면 '맞춤형 억제전략'이나 '국지도발 대비계획'과 같은 한미 당국의 공세적인 대북 군사전략에서 올까요?

미국이 씨 뿌리고 키워온 한반도 핵 문제

한반도 핵 문제의 시작

미국은 한국전쟁 중 두 번이나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1957년에는 정전협정을 어기고 남한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박정희 정권의 핵무기 개발 기도를 저지한 대신에 1978년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했습니다.

미국은 1991년 남한에 배치된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켰지만 북한에 대한 핵무기 공격 계획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세이머 존슨 공군기지에서 대북 핵무기 투하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핵공격 계획

작전계획 5026, 5027, 5029 등 미국이 한반도에
서 운영하고 있는 대북 작전계획들은 핵전쟁과
선제공격전략을 기본으로 하며 북한 체제 전복
과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전계획 5029
는 대규모 자연재해 등 전사가 아닌 평시에도 북
한에 군대를 투입해 북한 핵무기, 핵 시설을 미군
주도로 접수하겠다는 매우 도발적인 계획입니다.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한다는 오바마 행정부도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2010)에서 미
국이 핵무기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개최된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SCM)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무
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징후’만 보여
도 선제공격하겠다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채택하
였습니다.

북한의 핵 보유 동기와 개발 경과

북한의 핵 개발은 핵무기 사용 위협을 기본으로 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북한 핵 개발은 미국의 대북 군사적 행동에 대한 두려움 때문”

(미국 ‘대서양 위원회’ 보고서, 2007.4)

북한은 1985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1992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은 1993년 미국과 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불복해 유엔 안보리에 NPT 탈퇴 의사를 통고(1차 북핵위기)하였지만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무력 사용과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자 탈퇴를 유보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영변 핵 관련 시설 동결 등의 내용을 담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가 체결되었습니다.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3조 1항에서 북에 대한 ‘소극적 안전보장’(NSA) : 핵보유국이 비핵국가에 대해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제3국에 대해 ‘소극적 안전보장’을 조약(협정)의 형식으로 보장한 최초이자 마지막 사례입니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북한에 보장했던 ‘소극적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북한을 선제 핵공격 대상 국가로 지목했으며, 북한에 대해 고농축 우라늄(HEU) 개발 의혹을 제기하여 끝내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폐기하였습니다.(2차 북핵위기) 나아가 이라크를 불법 침공해 후세인 정권을 전복시킴으로써 북한을 결정적으로 핵무기 개발로 내몰았습니다. 북한은 2003년 NPT에서 탈퇴한 이후 2006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3차례의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대북 선제공격 전략인

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한미 당국은 이른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맞춤형 억제전략’(2015년까지 ‘작전계획’)으로 발전을 도입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킬 체인과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 무기 위협에 대응해 북한의 핵사용 단계를 위협 단계, 사용임박단계, 사용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하고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할 징후만 보이면** 사용임박 단계에서부터 한미 핵·재래식 전력으로 구성된 킬 체인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고, 그래도 여전히 살아남아 남한을 공격하는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사일 방어망으로 요격한다는 전략입니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선제공격을 불법화한 국제법 위반이며, 합참의 공언대로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 징후에 대해서도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재래전이 핵전쟁으로 발전된다는 점에서 민족의 생존을 불모로 한 무모한 전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핵전쟁 위기 높아

이렇듯 ‘맞춤형 억제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킬 체인, 미사일 방어체계 등은 **전쟁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을 촉발하고 확대하는 전략과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이 임박했다고 해서, 곧 전쟁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해서 선제공격을 하게 되면 전쟁위기를 평시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은 아예 봉쇄되어 버립니다. 한미 양국군이 ‘맞춤형 억제전략’에 따라 작전하게 되면 2013년 봄과 같은 한반도 전쟁위기는 전쟁으로 비화되기 십상입니다.

북한은 미국의 거의 유일한 핵공격 대상국입니다. 재래식 전력에서 압도적 열세에 있는 북한 으로서는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핵사용** 공지에 몰리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2014년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앞두고 B-2 스텔스 전폭기 3대를 괌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핵에는 핵으로 맞받아 나갈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핵전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킬

한미 ‘국지도발 대비계획’

한미 합참의장이 2013년 3월에 서명한 ‘국지도발 대비계획’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서북 도서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하면 **도발 원점은 물론 지원 세력과 지휘부까지 타격하겠다**는 매우 공세적인 작전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한국군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선제공격에 따른 반격이라고 해도 도발 원점을 넘어서서 지원부대나 심지어 지휘부까지 타격하려는 것은 **국제법상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적인 과잉 대응이자 국지전을 전면전으로 확전**시키는 모험주의적 발상입니다.

한미 양국군이 ‘국지도발 대비계획’에 의거하여 작전하게 되면 2010년 11월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국지전은 필연적으로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입니다.



군사주권의 핵심 (전시)작전통제권

대통령은 국가독립과 영토를 보전해야 할 헌법상 책무를 갖습니다. 이 책무 수행을 위해 대통령은 군통수권(군령권+군정권)을 행사합니다. 작전통제권은 군통수권, 군령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 국가독립과 영토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이 행사합니다. 한국 대통령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온전한 군통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따라서 스스로 국가독립과 영토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쟁이 나면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며 위헌적인 군사주권 제약 상태를 통탄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작전통제권은 국가독립과 영토,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후 보루입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은 국가가 국가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국가 권리입니다. 이에 한국이 스스로 국가독립과 영토를 수호하고 평화통일의 민족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작전통제권 환수 무기 연기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소위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무기 연기하였습니다.

한미 당국이 내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조건의 하나는 북한 핵·미사일 필수 대응 능력 구비로, 소위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미가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를 제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면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체계는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해소되지 않고 남북 모두 안보 딜레마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망을 완비한 후 작전 통제권을 환수하겠다는 주장은 작전통제권을 영원히 미국 손에 남겨 두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언제라도 북한을 선제공격(전쟁) 할 수 있는 전략과 전력을 갖추게 됩니다.



대일 군사적 종속과

대중 군사적 대결에 끌려들어갈 우려

또한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을 미국의 이해에 맞춰 구축할 수 있으며, 정보·요격 작전을 둘러싼 한미일 간 이해 충돌을 미국의 입맛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미국에게 한일 군사협력 강화와 군사동맹 구축의 지렛대를 쥐어줌으로써 대북·중 포위망 구축과 동북아 패권 강화라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뒷받침해 주게 됩니다. 한미일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으로 한국은 일본에 군사적으로 종속되고, 대중 군사적 대결의 한 축을 맡게 됩니다.

이렇듯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무기연기로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 지향적 정책과 군사전략이 들어설 여지가 원천적으로 제약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이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로서의 지위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화협정 체결로 분단 극복과 자주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재침략과 아시아 맹주 자리를 노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

일본 평화헌법 9조는 일본의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대 일본 정권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헌법 9조에 대한 해석 변경을 통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각 결의(2014. 7. 1)를 끌어냄으로써 끝내 재침략과 전쟁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중국 견제와 아시아 맹주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베 정권은 자위대의 무력행사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전수방어)한 '무력행사 3 요건'을 개정해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공격에도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무력행사 신 3 요건'을 채택함으로써 미국과의 미사일방어 작전, 기뢰 제거 등의 8가지 사례에 대해서도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자위권은 유엔 헌장 위배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게 된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해 자국의 패권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려는 속셈에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자위권 행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집단자위권은 “1국에 대한 공격행위가 곧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을 만큼 국가 상호 간의 관계가 지리적으로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긴밀한 경우 공동방위의 필요에서만 인정되는” 유엔 헌장(51조)상 권리입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본이 행사하려는 ‘집단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규정된 ‘집단자위권’이 아니라 **미일 동맹에 의한 ‘집단방위’**입니다.

동맹(평시 전쟁준비체)에 의한 ‘집단방위’를 ‘집단자위권’이라고 한다면,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 헌장과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안보체제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 것**입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더라도 한국의 승인 없이는 자위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의 첫 대상지는 다음 아닌 한반도입니다. 일본군(자위대)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요구로 한미연합군과 연합작전 및 훈련을 전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자위대가 한국 영해나 영공에 들어오려면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겠지요.

그러나 한국의 동의가 없이도 일본군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미국이 유사시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요구했을 때 한국이 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실제 일본군은 한국전쟁 당시 기뢰제거 등 소해작전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위대는 유엔 다국적군 일원으로 이른바 북한 점령과 안정화 작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현재까지는 유엔 주도의 집단안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평화헌법 9



조가 개정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전이라고 해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로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과 군비경쟁이 격화되면 한미일 대 북중러 간 대결 구도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양립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동북아 전략질서를 뒤흔드는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MD)

미국은 한미일 3각 미사일방어체계(MD) 구축으로 미국 우위의 현 동북아 전략질서를 미국 절대 우위의 전략질서로 바꾸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핵전력이 가장 우위에 있는 미국이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발사한 공격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은 절대 우위의 핵전력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유럽, 중동, 아시아에서 지역 국가들의 MD를 하나로 묶는 지역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지역 미사일 방어망들을 하나로 묶는 지구적 차원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이를 뚫기 위한 북·중·러의 핵·미사일 전력의 증강을 불러와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고, **군사작전에서 핵 의존도**를 한층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동북아에서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핵 대결 구도가 만들어져 **평화가 발붙일 여지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 사드(THAAD) 배치 미일 엠디(MD)작전의 전초기지가 될 것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 엠디(MD)의 핵심체계의 하나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주된 목적은 사드의 레이더인 ‘**엑스밴드 레이더**’(AN/TPY-2)배치를 통해 상하이, 베이징, 다롄, 톈화 등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일본 및 오키나와 등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해 **미국과 일본에 조기 경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드의 요격 체계는 **중국 동·북부 지역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겨냥해 날아오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사드 체계를 도입할 경우 한국은 미국 엠디 체계의 정보와 작전(요격)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그 효용성이 매우 낮은 반면 중국과의 갈등을 고조시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기게 될 것입니다.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

(신화통신 2014. 5. 29)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은 미일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을 끌어들이며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망의 하위 체계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결합시키고, 이를 통해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한미일이 공유하게 될 ‘북한 핵·미사일 정보’는 **한국 방어를 필요한 정보라기보다는 미일의 대중, 대북 탄도 미사일 방어에 필요한 ‘조기 경보’**입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미국으로 향하는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조기 탐지하여 일본, 미국에 넘겨주면 미일이 이를 요격하는 체계입니다.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한일 군사관계가 정보, 작전, 군수 분야 전반으로 확장되어 사실상 한일 군사동맹이 구축되고 경우에 따라 한국군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거나 정보, 군수 분야 등에서 일본에 종속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고,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도와주는 꼴입니다.**



동맹을 넘어 공동안보평화협력체로,
그 첫걸음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와 평화는 군사동맹이 아닌 동북아 공동안보평화협력체 구축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부터 시작됩니다.

- **동맹** : “우적 개념에 입각한 평시, 유사시 잠재적 전쟁 공동체” (국방대, 안보관계용어집, 2001)
예) 나토, 미일동맹, 한미동맹
- **집단안보체제** : “전쟁 또는 기타 무력행사를 금지한 가운데, 전쟁 또는 기타 무력행사를 하는 국가에 대해 나머지 모든 국가가 집단적으로 방지 또는 진압하는 체제” (합참, 군사용어사전, 2004)
예) 유엔, 유럽안보협력기구(CSCE→OSCE), 아시아 교류협력 및 신뢰구축 회의(CICA) 등

미국은 북한을 적으로 한 한미·미일동맹을 북중러를 겨냥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으로 확장하여 자신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구축되면 동북아는 이전보다 한층 격화된 대결과 무한 군비경쟁에 빠질 것이며, 끊이지 않는 분쟁과 전쟁에 시달리게 될 것 입니다.

따라서 동맹에 의한 대결과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동북아 모든 나라가 공동안보를 토대로 평화협력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는 역사적 경험과 냉전적 이념 갈등으로 다자공동안보체를 구축하기 어려운 동북아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그 돌파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남북, 북미 간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동북아 공동안보평화협력체 건설을 위한 디딤돌을 놓는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일중러의 패권 야욕을 제어하고 협력과 평화 지향의 다자공동안보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은 9·19 공동성명(2005)과 2·13 합의(2007)에서 각각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위한 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평화에 살자!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한국전쟁 이래로 북미, 남북이 상호 불신 속에서 적대적 대결을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적대관계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당사국들의 안보 우려를 동시에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한미동맹, 미국이 남한에 제공하는 핵우산 등) 폐기와 북핵, 조중동맹 폐기를 동시 행동으로 달성하고, 재래식 군축도 실현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나아가 동북아 다자 공동안보평화협력체를 결성하여 한반도 평화체제를 뒷받침하고 동북아 평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해

Toward a World
Free of Nuclear Weapon

핵없는 세계를 위해서는 미국, 러시아 등 핵 보유국들이

- 핵군축 의무의 성실한 준수 (핵확산금지조약 6조)
- 핵 선제 사용(First Use) 교리와 핵우산 폐기
- 핵무기 비보유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 불사용 약속(NSA)
- 핵무기 금지조약 체결 등

에 앞장서야 합니다.

한반도 주변국 핵탄두 보유 수

미국 : 7,700기 (전술핵 : 200기)	러시아 : 8,500기 (전술핵 : 2,000기)
중국 : 240기	북한 : 미상

** 출처 : SIPRI YEARBOOK(2013)

** 일본 30,000기 이상 핵무기 제조 가능한 플루토늄 보유

북한의 핵포기 입장과 조건

김계관 6자회담 수석대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를 북핵 포기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2009. 2)

외무성 성명,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조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를 빠른 속도로 추동하게 될 것”(2010. 1)

국방위 정책국 성명,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 없는 의지**”(2013. 4)

국방위 대변인 담화,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자 당과 국가와 천만 군민이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2013. 6)

평화협정이란?

“평화를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안”

정전협정은 군사적 적대행위의 종결을 담보하지만, 평화의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평화협정은 정치적, 국제법적으로 평화를 보장**해주는 가장 확실한 분쟁 종식 방법입니다.

정전협정 4조 60항에서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을 협의할 것을 건의”한 것도 정전협정이 갖는 제한성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며, 한미동맹과 조중동맹을 동시에 해체하고, 한반도에서 군축을 단행해서 미, 남, 북 어느 쪽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는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입니다. 또한 남쪽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전시 증원군을 파견하며 한국군 작전통제권도 행사합니다. 이에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주된 교전 당사자로 됩니다.





따라서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상태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평화협정에서 미국이 빠진다면 이 협정은 전쟁의 주된 교전 당사자(미국)를 협정 내용으로 구속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평화협정으로서의 국제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는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의 역사

· 정전협정 4조 60항(1953. 7. 27)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 내에 정치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외국군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할 것을 건의한다”고 명시.

· 제네바 정치회담(1954. 4. 26~6. 15)

정전협정 4조 60항에 따라 19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림. **남한과 미국은 유엔 감시하 남북 총선거와 선 중공군 철수를, 북한은 중립국 위원단의 감독하에 전조선위원회가 주관하는 남북 총선거와 6개월 이내 모든 외국군 철수를 주장.** 합의 도출하지 못한 채 폐회.

· 4자 회담(1997. 3~1999. 8)

김영삼과 클린턴의 제안으로 시작된 4자 회담은 2년 반 동안 6차례가 열렸으나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의제로 채택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대립한 끝에 결국 결렬.**



· **북미 공동코뮤니케(2000. 10. 12)**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 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의 여러 방도가 있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였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처음으로 북미 사이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전망을 공유.

·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 9. 19)**

“직접 관련 당사자들은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협상을 가질 것”.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 과제를 당면 협상 과제로 이끌어 냄.

· **10·4선언(2007. 10. 4)**

10·4선언 4항 :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자는 남북 간 최초 합의.

평화번영의 지름길을 개척하는

평화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핵 폐기와 함께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 전략과 대남 핵우산 제공이 폐기되어 한반도가 **핵전쟁 위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북미, 남북 간 적대관계가 해소되어 연평도 포격 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이 사라집니다.**

북미, 북일 수교로 관계가 정상화되고 동북아 공동안보평화협력체 건설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남북 간 군사적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평화군축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병력(2013년 약 64만명)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국방예산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방예산의 50%인 17조 3천 억원(2013년 기준)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돌려 쓸 수 있습니다.

경제협력 등 남북 교류가 크게 늘고, 만주, 시베리아, 유라시아 진출의 길이 **확실히 열립니다.**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군 민주화와 인권 상황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드는 평화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소파(SOFA) 등 불평등 조약과 협정이 폐기됩니다. 한미동맹과 조종동맹이 동시에 해체되어 국가와 민족이 동맹의 뒷에서 벗어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며 미군기지가 폐쇄, 반환됩니다. 작전통제권도 되찾게 됩니다. 이로써 한국이 오랜 대미 정치, 군사적 종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주둔비(방위비 분담금)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중생 압사 사건 등의 미군범죄, 미군기지 환경 오염과 파괴 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집니다. 굴욕적인 한미 FTA도 개폐될 수 있는 등 경제적 종속에서도 벗어납니다.



통일의 대문을 여는 평화협정

한반도 분단은 외세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남북 대결과 한국전쟁 등 분쟁은 외세의 개입을 허용하고 분단을 영구화합니다.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로 한반도 평화를 항구적으로 정착시켜야 대결과 외세의 개입을 막고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북 정상은 6·15 공동선언(2000)에서 통일방안에 합의한 데 이어 10·4 선언(2007)에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당사자가 되는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데 합의함으로써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였습니다.





통일로 가자!

통일은 대박?

2014년 초부터 한미 당국은 전례 없이 공개적으로 ‘북한 변화 유도’를 표방하며 북한 정권 및 체제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꾀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되어 있을 것...이를 위해 다 같이 죽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 2013. 12. 24)

‘북한 변화 유도’의 한 축은 군사적 강압에 의한 것이며, 다른 한 축이 바로 ‘통일 대박론’입니다. ‘통일 대박론’은 대중들에게 통일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심어 줌으로써 일부 중산층은 물론 일부 노동자·민중들의 호응까지 얻고 있습니다.

‘통일 대박론’은 반통일세력인 보수수구세력을 통일의 주체로 내세우며 안보는 물론 통일을 위해서도 보수수구세력이 계속 집권해야 한다는 장기 집권 야욕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통일대박론과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론

‘통일 대박론’은 또한 북한의 지하자원과 노동력, 동북아, 시베리아, 유라시아 지역의 자원과 시장, 물류를 노리는 국내외 독점자본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변화 유도’의 또 다른 한 축인 군사적 강압 정책은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전력을 도입, 과시하고, 북한 급변사태 대비·유도 훈련을 전개하며,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거나 이라크 점령 작전에 참여했던 미군부대를 휴전선 이남에 배치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하드·소프트 웨어 강압 방식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나 체제가 급격히 붕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 판단입니다.

“김정은 통치 확고해”

(마이클 플린 미 국방정보국 국장, 2014. 2. 11)

“북한 붕괴 가능성 희박하다”

(조엘 워트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 2014. 1. 15)

흡수통일은 재앙!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은 남북 어느 쪽이 선제 공격을 하든 민족 공멸의 재앙을 낳을 뿐입니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 24시간 내에
수도권 시민과 국군, 주한미군을 포함해
사상자가 230여 만 명에 이를 것”**

(합참, '남북군사력 평가연구' (2004), 「사시인」, 2010. 11. 29)

더욱이 한국의 안보·국방 책임자들은 북한이 남한을 선제공격 할, 매우 모호한 징후나 상황에서 서도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선제 공격 징후가 있다면 장사정
포를 선제 타격할 수도 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2013. 11. 2)

**“북한이 도발을 할 경우 체제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

(한민구 국방장관 : 2014. 7. 20)

한미연합군의 대북 전략(맞춤형 억제전략)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남한의 무력 흡수통일 기도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시장경제로의 흡수통일도 민족적, 민중적 재앙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흡수통일을 할 경우 막대한 통일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남북 민중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비용 지출을 최대로 억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시장경제로 흡수통일될 경우 자본 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은, 동독의 사례처럼, 최소한 한 세대 동안은 현 수준보다도 오히려 크게 후퇴할 것입니다.

남한 민중들 또한 통일비용 조달에 따른 복지비의 지출 감소로 복지 후퇴를 감내하게 될 것입니다.

(흡수통일의 경우)

“한국이 통일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독일 할레 경제연구소, 연합뉴스, 2012. 1. 31)

독일식 흡수통일의 폐해

통일된 지 25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도 독일은 여전히 흡수통일의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통일된 지 15년이 지난 2005년을 전후로 수년 동안 독일은 10%를 넘는, 특히 구 동독 지역은 20%를 상회하는 살인적인 실업률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지만 통일 전 동독은 완전고용, 서독도 완전고용에 가까운 3% 이하의 실업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흡수통일의 폐해의 심각성을 가늠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과 노조 조직율 감소,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과 저임금 일자리 양산, 보편적 복지의 선택적 복지로의 후퇴, 실업급여와 사회부조의 후퇴 등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로써 독일은 유럽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급격하게 악화된 나라로, 빈곤에 처할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전락했습니다.(독일 연방통계청, 조선일보, 2014. 1. 3 등). 동독 지역의 임금은 여전히 서독 지역에 비해 단위 시간당 7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은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각 비용의 개념, 통일 시기, 통일 방안, 비용 기간의 산정 등 추정 방식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전제로 하면서 통일부의 주장을 살펴보면

통일비용 : 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의 총체로, 정치나 화폐 등 제도통합 비용, 생산시설이나 인프라 구축 등 경제투자 비용, 인도적 차원의 긴급구호 등 위기관리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분단비용 : 분단상태가 지속됨으로써 발생하는 각종 유·무형 비용을 말하며, 국방비 등은 유형적 비용에, 이산가족 고통 등은 무형적 비용에 속한다.



통일비용 < 분단비용 ≤ 통일편익

통일편익 : 통일로 얻게 되는 경제적, 비경제적 보상과 혜택으로, 분단비용 해소나 시장 확대 등은 경제적 편익에, 전쟁 위험 해소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등은 비경제적 편익에 속합니다.

대체적으로 통일비용보다는 분단비용이, 분단비용보다는 통일편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단비용은 장기적이고 소모적인 비용인 반면 통일비용은 상대적으로 한시적이고 투자성 비용으로, 대체적으로 분단비용이 통일비용보다 큼니다. 그러나 통일 시기가 빨라져 분단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흡수통일방식으로 통일을 하며, 통일 과정이 길어져 통일비용 지출 기간과 액수가 늘어나고,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을 남한 주민의 생활 수준으로 급격히 끌어올리게 될 경우 통일비용이 분단비용보다도 커질 수 있습니다.

통일편익은 분단비용이 해소되고 영구히 발생하는 것으로, 분단비용이나 통일비용보다 큼니다.

통일편익 추정하기

국방예산 감축에 따른 편익 : 우리나라 국방비는 2012년을 기준으로 GDP의 약 2.6%, 통일 독일 국방비는 GDP의 약 1.2%입니다. 따라서 통일 후 남한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을 독일과 같은 1.2%로 가정하면 현재 약 1.4%의 국방예산 상의 분단비용이 발생합니다. 2012년 남한 GDP는 1,377조 4,570억 원이므로 이의 1.4%인 약 **19조, 2,800억 원이 분단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연간 대학 등록금 12조 원의 약 1.6배에 해당하며, 32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통일코리아가 2050년에 실질 GDP 규모가 6조 5천억 달러에 달해 독일과 프랑스를 추월하여 세계 8위가 될 것”
(골드만 삭스, 통일한국, 북한 리스크 재평가, 2009. 9)

흡수통일에 따른 통일비용 추산

통일연구원 등 국책 연구 기관들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한국의 통일비용은 **최저 831조 원에서 최대 7,000조 원**에 이릅니다.

독일처럼 북한 주민의 소득을 **남한 주민의 소득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경우 약 7,000조 원의 통일비용**이 들며, 이는 20년간의 독일 통일비용 2조 유로(약 3,548조 원)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거액으로, **남한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소득을 **남한 소득 수준의 50%로 끌어올리는 경우에도 4,746조 원**이 들어가 독일 통일비용보다도 많습니다.

독일 통일비용과 같은 수준의 3,600조 원을 통일비용으로 투입하는 경우에도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한 비용은 불과 **약 6%(227조 원)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일비용의 약 50%를 동독 주민들의 임금과 복지비용 등으로 지출한 독일에 크게 못 미칩니다. 이에 흡수통일 후 일정 기간 **북한 주민의 노동 3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통일은?

합의통일!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방법은 북한 정권이나 체제 붕괴에 따른 흡수통일이 아니라, 통일의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천명한 7·4 남북공동선언, 남북 화해와 교류 및 불가침에 대한 기본합의서, 통일 방안에 합의한 6·15 공동선언, 평화체제 구축 지향을 담은 10·4 선언 등 남북이 기왕에 합의한 내용에 기초한 합의 통일입니다.

합의통일은 통일의 3대 원칙을 실현할 수 있고, 북한과 주변국의 동의 하에 통일을 이룰 수 있어 가장 **현실적**이며, 통일의 충격과 저항,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가장 **합리적**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인적, 물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북이 합의 할 수 있는

통일방안과 통일국가 체제는?

한국의 통일방안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남북연합)’입니다. 북한의 통일방안은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연방제)’입니다. 남북 공동의 통일 방안은 6·15 공동선언 2항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연합·연방제입니다.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15공동선언 2항)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는 완전한 통일을 이루기 전에 과도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점을 살려 연합·연방제 통일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은 통일을 위한 민족의 최우선적 과제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지방 정부에 더 많은 정치, 외교, 군사권을 주는 연합제를, 나중에는 중앙 정부에 더 많은 정치, 외교, 군사권을 주는 단계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 56.4%가 남북 두 체제 유지 또는 절충하자는 입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2013 통일의식조사)

연합·연방제로 통일한 후 남북은 **완전한 통일**(체제 통합)을 지향해 나가게 됩니다. 통일 국가의 체제는 남북 체제의 긍정적 측면을 살리고 부정적 측면을 배제하여 남북 주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체제여야 합니다. 물론 서로의 체제를 장기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실시한 2013년 통일 의식 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 43.6%만 남한 체제로 통일하자고 합니다. 나머지 56.4%는 남북한 두 체제를 유지하거나 절충하자는 입장입니다.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은 힘을 합쳐 동북아에 새로운 공동안보·평화체제 구축에 기여하는 견인차가 되어야 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는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과 동맹과 전쟁을 지양하는 **자주국가, 평화·복지국가**여야 합니다.

다져 보자 평화협정 Q&A

뜨거운 감자,

북핵 폐기와 미군철수

북핵폐기와 미군철수, 두가지 과제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Q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A 북핵 포기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여부에 달려 있어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불가 선언을 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그만큼 북핵 폐기가 어려워졌음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주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한 조건에서**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북한 외무성, 2013. 1. 23)는 것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변한 조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북핵 문제의 **원인**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북핵 문제의 **결과**입니다. 원인을 해결(대북 적대정책 폐기)하면 결과도 이와 연동해 해결(북핵 폐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핵무기 폐기는 북한 헌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여부에 따라 북핵은 빠른 시일 안에 폐기될 수도, 장기 보유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전세계 비핵화와 연계시키는 것도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바꾸지 않는 조건에서는 전세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북한이 미국의 핵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만 폐기한다면 전세계 비핵화가 달성되기 전이라도 한반도 비핵화가 실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009년 2월 김계관 당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을 방문한 미국 대표들에게 북핵 폐기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핵우산 제거, 한미동맹 파기”를 제시한 반면 전세계 비핵화를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 불가 주장을 어떠한 경우나 조건에서도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이해하거나 단순히 세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이해



하게 되면 전세계 핵무기가 폐기될 때까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통일을 포기하거나 미루겠다는 주장으로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어려울 것이며,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평화통일을 이루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세계 핵무기 폐기는 그 날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전세계 핵무기 폐기는 우리 민족과 남북의 힘만으로 해낼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와 북핵 폐기(한반도 비핵화)는 우리 민족과 남북이 힘을 모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며, 이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통일도 전세계 핵무기 폐기에 훨씬 앞서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전세계 비핵화를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의 조건으로 삼게 되면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통일의 기회를 놓치거나 마냥 뒤로 미루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Q 북한 핵무기를 막으려면 핵우산을 강화하거나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A 핵우산도 제거하고 북핵도 포기하는 한반도 비핵화가 정답

핵우산은 미국이 핵무기를 이용해 제3국의 남한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남한이 공격을 당했을 경우 보복 공격을 한다는 핵전략입니다.

1978년 남한에 처음 적용된 핵우산은 미국이 북한에 소극적 안전보장(NSA)을 제공한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1994. 10)로 무력화된 적도 있습니다. 미소 냉전의 산물인 핵우산은 군사전략과 작전에서 핵 의존도를 높이고 재래전을 핵전쟁으로 치닫게 할 가능성이 큼니다.

미국의 대북 핵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 직전 또는 개전 초기에 핵과 미사일, 지휘 거점 등 북한 지역의 700여 개 이상에 달하는 표적을 타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미가 2013년에 처음 채택한 '맞춤형 억제전략'은 대북 선제 핵공격 전략으로, 그 공세적 성격과 북한의 핵전력이 충돌하면 남북 간 위기는 핵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이 남한에 다시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남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한편 남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남북한의 핵보유는 필히 일본이나 대만의 핵보유로 이어져 동북아에서 핵도미노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일본이 미·러를 능가하는 핵강국으로 부상해 한반도 및 동북아 전략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남한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핵무장은 동북아 안보 정세를 헤어나기 어려운 핵 대결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남한의 핵무기 도입이나 개발은 국가안보를 악순환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할 뿐 결코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핵우산도 제거하고 북핵도 폐기하는 것이 지역의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아가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비핵화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반도 비핵화도 더 굳게 다져지고 동북아가 근원적으로 핵전쟁 위험에서 벗어나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Q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미국이 북을 공격하지 않을까요?

A 제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마음대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협정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어렵게 하는 국제법적 장치입니다. 국제사회에 상호 불가침을 공약하고, 중립국 등으로 구성된 기구가 평화협정 이행과 위반을 감시합니다. 무엇보다도 한미 동맹 폐기와 주한미군 철수를 통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물리력을 제거하고, 군축을 통해 남북 간 전쟁 가능성도 제거합니다.

물론 이러한 장치들을 둔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미국이 명분을 조작하여 북한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전상태 하에서도 미국은 북한을 전면 공격하지는 못했습니다. 명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의 한반도 전쟁 반대, 북한 군사력과 체제의 공고성, 대다수 남한 국민들의 한반도 전쟁 반대 등 미국이 외면할 수 없는 한반도 전쟁 불가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전상태에서도 북한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것은



평화협정 하에서는 더욱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미국은 전세계에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일본 군대와 손잡고 대북 공격에 나설 수도 있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는 일본 국민의 반대를 넘어서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남한군이 남한 국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북한을 직접 공격하거나 미일 연합군의 대북 공격을 지원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약을 지킨 적이 없다고 하지만, 베트남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미국이 다시 베트남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베트남보다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다시 일으킬 명분을, 미국민과 세계인을 설득할 정치적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60년 넘게 거부해왔던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는 것은 미국의 힘의 쇠퇴와 전세계 평화애호세력, 민족자주역량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은 과도한 피해의식이자, 쇠퇴하는 미국의 힘을 절대화하는 수세적 주장입니다.

Q 미군철수가 가능할까요? 미국은 무기 팔고 주둔비 올려 받고 장땡인데..

A 국민여론 32~62%가 미군 철수 원해

외국 군대의 장기적 주둔은 국가주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정전협정 4조 60항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당연히 나가야 합니다.

통일부의 연구용역(통일연구원 등, 통일부 남북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결과 보고회 자료집, 2011. 10. 7)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제로 외국군대 주둔 문제를 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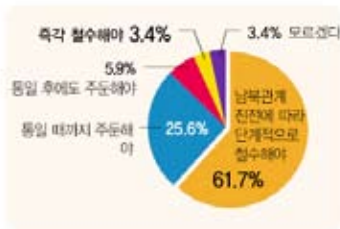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주한미군의 철수가 결의된 바 있으며, 2012년 미국 대선에서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론 폴 공화당 예비 경선 후보가 미국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39~62%(중앙일보 2007. 9. 22)가 미군철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데이너 페리노 전 백악관 대변인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도 “만약 주둔국 국민이 미군철수를 요구하면 우리는 떠날 것”이라 말합니다.(연합 2008.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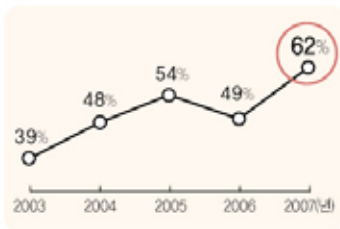


2002년 주한미군에 의한 두 여중생 압살 사건으로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수 차례에 걸쳐 항의집회를 벌여 한미 당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영향으로 미국은 작전통제권 반환을 준비하게 되었고, 한국의 대선에서는 평등한 한미관계를 주장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 협상에서 다수 국민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게 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언제? (뉴스위크 한국판 2008. 4.23)



주한미군 철수 지지율 변화(중앙일보 2007. 9.22)

Q 미군이 나가면 북한이 남침하지 않을까요?

A 주한미군 전력을 제외하고도 남한의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위

2008년을 기준으로, 북한 국방비는 5.5억 달러(통일부 추산), 남한 국방비는 257억 달러로 남한이 45배나 많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청와대 보고(2009년)에서 “주한미군이나 전시증원병력을 빼놓고서도 한국군이 북한군보다 10% 가량 우세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신동아, 2010. 4)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전력(전술핵무기 10여 개)은 군사적으로 억제적, 방어적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공세적 측면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이 설사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쟁을 해서 북한이 이길 수 없다.”(연합뉴스, 2006. 12. 6)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협론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이 계속되어야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는 한미 양국의 군부, 공안 기관, 수구언론, 무기업체 등이 국민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거짓 선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결국 북한 퍼주기 아닌가요

A 평화가 밥이고 안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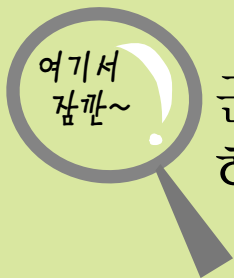
자장면 한 그릇 값으로 누린 평화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지원은 1조 8,567억 원(정부 지원 1조 1,612억 원, 민간 지원 6,964억 원, 통계청 2014. 5. 15)으로, 국민 1인당 1년에 약 3,700원을 부담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은 “(1년에) 자장면 한 그릇으로 평화를 누린 셈”이라고 말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주한미군 지원금, 대북 지원금의 무려 16배

같은 기간 주한미군 지원금은 방위비 분담금 5조 9,999억을 포함하여 3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대북 지원금의 16배로, 주한미군 1인에 대한 지원금 약 17억 원은 북한 주민 1인에 대한 지원금 약 9만3천 원의 17,000배를 넘습니다.

대북 지원금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지만, 주한미군 지원금은 대북 전쟁 준비를 위한 비용입니다.



군 기득권

허물기(군 개혁)

한국군은 지난 60년 간 개혁의 무풍지대에서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연간 35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쓰면서도 국방을 책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민통제의 부재, 육군 편중의 기형적 군 구조, 독자적인 전략 및 작전 기획·계획 수립 능력의 부재, 장성을 포함한 고급장교의 비대화와 봉급 및 연금 특혜, 방산비리 등 군은 이제 '무능력', '비효율', '특혜', '비리'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에 역대 정권은 군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국방개혁을 법으로 제정(국방개혁 2020)해 시행하였으나 이마저도 이명박 정권에 의해 전면 후퇴하고 말았습니다.

국방예산 삭감과 군 개혁(기득권 허물기)는 보수수구 세력의 안보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고 민주화와 평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고리입니다.

왜곡된 안보의식 넘어

평화, 통일 의식 확산해야

군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의 온갖 특혜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왜곡된 안보의식을 확대, 재생산해 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 60년간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아 있는 것도, 군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당연시되는 것도 이를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 가난한 사람, 노동자, 민중의 63%가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찍은 것도 왜곡된 안보의식에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안보의식을 떨쳐버리고 진실에 기초한 평화, 통일 의식을 확산 해야 합니다.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미군이 주둔해야 하고 주둔비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아니다! 한국군 단독 군사력 만으로도 북한 군사력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다. 그동안 미군에 퍼준 돈이면 미군 장비 다 사고도 남는다.



여기서
잠깐~

북방한계선(NLL)은 영토선?

북방한계선(NLL)이 '영토선'이라는 주장이 난무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북방한계선은 국제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북방한계선은 (미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된 것으로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 선은 일방적으로 국제수역을 분리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다.”(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1975년 2월 28일, 주한 미국 대사관과 주한미군 사령부 및 유엔군 사령부에 발송한 비밀 전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 3조)

NLL은 해상경계선?

국방부는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2012년 국방백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전협정을 왜곡하는 주장입니다.

“북한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김영삼 정부 시 이양호 국방장관 국회 답변 1996. 7. 16)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 “이 점에서 이양호 국방장관의 ‘NL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는 답변은 맞는 것”(조선일보 1996. 7. 17)

평화협정 통해 해상경계선 확정해야

10·4 선언에서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두기로 한 것은 정체불명의 NLL로 분쟁의 바다가 되어 버린 서해를 평화와 상생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고민의 반영입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해상경계선을 확정해야 합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해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전문),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4조)하며, “...침략적 전쟁을 부인”(5조)하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3항)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의 사명은 나라의 주인인 시민의 헌법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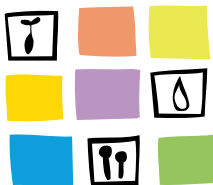


평화 홀씨가 되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008년 이래로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1만 여 명의 추진위원과 4만 여 명의 길잡이들이 이 운동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7·27 정전협정 체결일을 즈음하여 매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촉구 한마당 행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운동을 보다 대중적으로 폭넓게 벌여 나가자는 취지에서 평화 홀씨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평화홀씨, 나는 !

1. <평화홀씨> 책자와 꾸러미 건네주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널리 알리기, 소중한 지인들부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책자와 홀씨 꾸러미를 전해 주세요!

2.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알리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알리는 것, 관련 소식들을 평통사 홈페이지(peaceone.org)를 통해 확인하고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에 알려 주세요!

3. 평화통일을 위한 한표 행사하기

나는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다! 지자체, 총선, 2017년 19대 대선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후보를 뽑아요. 반평화통일정책을 추진하는 후보를 꼭 심판해 주세요!



4. 7.27 평화홀씨 행사에 참가하기

평화홀씨 퍼트리기, 싹 틔우기, 꽃 피우기, 열매 맺기를 주제로 2013~2017년까지 매년 7·27 정 전협정일에 즈음해 열리는 평화협정 실현을 위한 평화홀씨 행사에 함께 참여해 주세요!

5. 홀씨 모임 만들기, 평화 나누기

- **합창 홀씨** 평화의 노래로 세상을 깨우다
- **작가 홀씨** 평화홀씨 展(미술작가, 시화 등)
- **공방 홀씨** 평화 물품 제작
- **청년 홀씨** 2030 청년들의 평화 행동
- **판소리 홀씨** 평화통일 염원을 창에 담기

이밖에도 공부, 강연, 요리, 사진, 산행 등 다양한 홀씨 모임을 만들어 평화를 나눠요.

6. 평화발자국 - 평화의 길 함께 걷기

지역별로 100여 개의 평화의 길을 개발해 함께 걸어요. 2017년 평화홀씨 행사는 제주에서 파주 임진각까지 평화발자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7. 평화통일 종자돈 후원하기

평화홀씨 사업은 여러분의 정성으로 추진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메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0년째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전국 각지 2,500여명의 회원들의 순수한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작은 수첩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에서 제작해 자발적 후원을 받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한권의 제작비는 1,000원입니다. 1만원이면 10권! 2만원이면 20권! 단 한권도 좋습니다. 이 수첩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수첩 신청, 구입 문의 :

spark946@hanmail.net, 02-711-7292

후원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 소 (120-837)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번지 2층
홈페이지_www.peaceone.org 이메일_spark946@hanmail.net
전 화_02_712_8443 팩 스_02_712_8445 연구소_02_711_7293